

# 마이너리티의 역사기록운동과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林慶花\*\*

- |                                       |                          |
|---------------------------------------|--------------------------|
| I. 머리말                                | III. 상호 참조의 마이너리티 역사기록운동 |
| II.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와<br>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 IV. 한국의 ‘진상조사’           |
|                                       | V. 맺음말                   |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배봉기가 1975년에 최초로 공개증언을 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 오키나와 반환 직후인 1972년에 이루어졌던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 활동과 그와 연계되었던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에 주목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60년대 말부터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을 전개하여 그때까지의 軍·官의 논리에 입각해 있던 戰史에 대항하여 주민들의 체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1972년에 오키나와전투 당시 조선인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위해 결성된 朝日합동조사단은 이 체험기록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서 망각되었던 조선인 ‘군부’나 ‘위안부’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가 수행한 침략전쟁의 참상을 아래로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도는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전투의 또 하나의 피해 주체인 조선인들을 통해 스스로의 피해를 상대화하고 스스로의 전쟁책임의 역사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전투 체험기록운동의 이러한 질적 변화는 배봉기 등장 of 사회적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배봉기, 오키나와,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 오키나와 전투 체험기록운동, 상호 참조

## I. 머리말

해방된 지 30년 후인 1975년에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생존자가 오키나와에서 나타났다. 바로 배봉기(裴奉奇, 1914~1991)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에서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에 최초로 공개증언을 하기 16년도 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가해국 일본에서 어떻게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의 공개증언이 가능했을까.

“일 안 해도 돈 버는 데가 있어. 옷도 필요 없고 이불도 버리고 가. 더운 곳이라 사람들이 벌거벗고 살아. 과일도 많이 있어. 파인애플, 바나나, 산에 가서 바나나 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거든”<sup>1)</sup>이라는 업자(여자 소개인)의 말에 속아 배봉기가 끌려간 곳은 오키나와의 한 섬 도카시키(渡嘉敷島)의 ‘위안소’였다. 1945년 3월에 오키나와전투가 개시되기 5개월쯤 전의 일이다. 본토 방위를 위해 시간을 끌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초래해 전의를 꺾겠다며 ‘커다란 도박’<sup>2)</sup>을 감행한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을 상대로 격렬한 지상전을 전개하여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도카시키섬에서는 미군의 상륙 직후에 섬에 남겨진 700여 명의 주민 중 300여 명이 집단으로 자결하도록 내몰려 목숨을 잃었고, 미군에 대치하며 저항하던 일본군들에 의해 조선인 군부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배봉기를 포함한 ‘위안소’의 조선인 여성 7명도 전쟁의 참상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들 중 3명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고,<sup>3)</sup> 2명은 탈영한 일본군 및 조선인 군부들과 함께 탈출, 배봉기와 또

1) 川田文子,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東京: 筑摩書房, 1987, 39면.

2) 極東国際軍事裁判研究会 編, 『木戸日記-木戸被告人宣誓供述書』, 平和書房, 1947.

3) 도카시키 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으로 3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중 ‘하루코’라는 조선인 여성은 즉사했다(川田文子, 위의 책). 배봉기의 초기 증언을 기록한 아마타니 데쓰오(山谷哲夫) 감독의 다큐멘터리 『오키나와의 할머니-증언 종군위안부(沖縄のハルモニ-証言・従軍慰安婦)』(1979)에 따르면, 당시 일본육군 소위였던 지넨 조보쿠(知念朝睦)가 시체를 매장했다. 이후 1951년에 전몰자 위령탑으로 이 섬에 ‘백옥의 탑(白玉之塔)’이 건립되어 ‘일본군’ 전사자들이 합사되자, 하루코의 유골도 함께 옮겨졌다. “군인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도카시키섬에 서는 하루코의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성 1명이 마지막까지 일본군과 함께 남아 있었다. 조선인 군부가 허락 없이 감자를 먹었다고 일본군 장교한테 참수당하는 장면을 맨눈으로 지켜보기도 한 그녀는, “군대를 위해서 지독하게 고생 많이 한” 끝에 8월 말에 일본군과 함께 투항했고, 최종적으로 민간인 수용시설이었던 이시카와(石川)수용소에 보내졌다.<sup>4)</sup> 그 후 미군정이 실시된 오키나와에서 들은 한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로부터도 소외된 채 방치된 후 뿔뿔이 흩어졌다. 배봉기는 초토화된 오키나와의 사방을 헤매 다니며 식모살이나 식당 일에서 성매매까지 허다한 궂은일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시절보다 더 처참한 방랑 생활을 보낸다.<sup>5)</sup>

한편, 미군의 점령지가 된 오키나와의 통치기구인 미국민정부(USCAR)는 1953년 1월에 류큐열도 출입관리령을 공포하여 오키나와 거주 외국인들을 등록하기 시작했다. 미국민정부는 물론 오키나와, 일본, 남북한의 어떤 행정기관이나 동포 조직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던 배봉기는 이 과정에서 강제되거 대상인 무국적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미군통치기를 살아낸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때문에 수속 같은 것은 하지 않았던”<sup>6)</sup>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어떤 국가의 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되었던 배봉기는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로 끌려온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특별 재류’ 자격을 얻게 되었다. 패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등록됨으로써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키나와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신경통이 악화되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배봉기를 보다 못한 지인들이 먼저 국가에 원조를 요청했다고 한다.<sup>7)</sup> 이로써 배봉기는 30년 만에 국가에 등록되었다. 매년 재류 기간을 갱신하며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했지만, 그녀의 소망대로 오키나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신원보증인이었던 신시로 규이치(新城久一)는 배봉기가 60년대에 식당일을 도왔던 가게 주인의 사위였다. 배봉기의 부탁을

4) 한국정신대연구소,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여성가족부, 2006, 48~49면.

5) 한국정신대연구소, 앞의 글; 金美惠, 「沖縄のなかの朝鮮人(下)」, 『月刊イオ』 209, 朝鮮新報社, 2013, 66면.

6) 「30年ぶりに自由の身に-戦時中“連行”の韓国婦人那覇入管事務所特別に在留許可」, 『琉球新報』, 1975. 10.22.

7) 川田文子,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東京: 筑摩書房, 1987, 177~178면.

받은 그는 탄원서를 써서 절차를 밟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한다.<sup>8)</sup> 나하(那覇)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서 배봉기는 “나는 ‘우군’(일본군-필자 주)한테 속았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 부끄러워 전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sup>9)</sup>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하는 오키나와의 주요 신문들은 첫 기사부터 배봉기에 대해 “오키나와전투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의 증언이 직접 얻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하여 그녀가 강제연행된 피해 생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이 재류 허가라는 국가로부터의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진 이유라는 것도 강조한다. 나아가 나하입국관리사무소 소장 오쓰 야스오(大都會安雄)도 “강제연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직 더 있을 것 같다. 오키나와는 호적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전후에 본인의 신고로 다시 제작되었다. 성을 바꾸어 신청하거나 오키나와 사람과 결혼해서 일본인이 된 사람이 많지 않을까”<sup>10)</sup>라고 언급하여, 그녀가 강제연행되었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표하지 않았다. 배봉기의 증언은, 그녀의 ‘불행한 과거’가 은폐되고 침묵되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강제연행으로 야기된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였다는 사회적인 인식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배봉기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신시로도 “(배봉기는)전쟁의 희생자임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배봉기를 돌본 이유를 설명했다.<sup>11)</sup> 당시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신문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한다.

오키나와로의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이 쇼와(昭和) 47년 8월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숫자는 ‘군부’ ‘위안부’를 포함해서 1만 명이라고도 3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sup>12)</sup>

8) 山谷哲夫 제작·감독, 『沖縄のハルモニ-証言・従軍慰安婦』, 無明舎, 1979.

9) 「30年ぶり“自由”の身-戦中、沖縄に連行の韓国女性法務省が特別在留許可」, 『沖縄タイムス』, 1975년 10월 22일.

10) 「30年ぶりに自由の身に-戦時中“連行”の韓国婦人那覇入管事務所特別に在留許可」, 『琉球新報』, 1975.10.22.

11) 山谷哲夫 제작·감독, 앞의 자료.

12) 「30年ぶりに自由の身に-戦時中“連行”の韓国婦人那覇入管事務所特別に在留許可」, 『琉球新報』, 1975.10.22.; 「30年ぶり“自由”の身-戦中、沖縄に連行の韓国女性法務省が特別在留許可」, 『沖縄タイムス』, 1975.10.22.

즉, 배봉기의 공개 증언이 있기 3년 전인 1972년에 오키나와로 강제연행된 조선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5월에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고 3개월 후의 일이다. 본고에서는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발견된 사회적 배경으로, 오키나와가 처한 특수한 사정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반환 직후에 이루어졌던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 활동과 그와 연계되었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1년에 한국에서 김학순의 공개증언이 가능했던 것은, 오랜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과, 그 과정에서 성장한 인권의식과 여성운동, 1990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과 함께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이 한국사회에 피해자들의 ‘말’을 들을 ‘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일컬어진다.<sup>13)</sup> 물론 배봉기의 증언은,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자 했던 김학순의 증언과는 달리,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된 자기증명’이었다는 차이가 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의 재일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였던 송신도(宋神道, 1922~2017)의 공개증언이 1992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배봉기가 굳이 이 시기에 증언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한국의 사례를 소급적으로 적용해 보면, 미군통치기에 미군의 강압적 지배와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여 본토복귀 운동, 반전·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오키나와에서 일본으로의

13) 소현숙, 「기림의 날에 기억하는 김학순과 그녀의 증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http://www.kyeol.kr/node/180>, 게시일: 2019.08.16.

14) 김미혜, 「오키나와의 조선인-배봉기 씨의 ‘자기증명’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나를 증명하기-아시아에서의 국적·여권·등록』, 한울, 2017.

15)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 일본정부가 오키나와의 조선인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국적자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재류허가를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1975년은 배봉기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川田文子, 『イアンフとよばれた戦場の少女』, 東京: 高文研, 2005, 13면). 하지만, 일본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965년 일한법적지위협정으로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재일조선인들에게 부여된 협정영주 허가의 신청기한이 협정 발효 시점으로부터 5년 후인 1971년이었음에도, 일본정부는 그 이후에 일본에 반환된 오키나와에 거주해 온 조선인들에게도 적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한 배려’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등은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복귀와 함께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키나와 사회에 배봉기라는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들을 '귀'를 마련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이 진상조사의 배경과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sup>16)</sup>

## II.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와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해방 후 오키나와전투에 강제연행<sup>17)</sup>된 조선인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통치 시기의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만큼, 오키나와로 강제연행되었던 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희박했다. 그 가운데 오키나와에서 미군속으로 있던 민단계 재일조선인 김동선은 1966년에 현지 조사를 통해 오키나와전투 말기에 구메섬(久米島)에서 조선인 일가족 7명이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된 사건을 파헤쳐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일가족의 유골을 수습하여 나하의 절에 안치하고 매년 학살일인 8월 20일에 오키나와 주민들과 함께 위령제를 지냈다.<sup>18)</sup> 오키나와 반환의 해인 1972년 4월에는 이 학살사건이 일본의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sup>19)</sup>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에 머무는 일부

---

16)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신주백, 「한국근현대사와 오키나와-상흔과 기억의 연속과 단절」,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임경화, 「오키나와의 아리랑-미군정기 오키나와의 잔류 조선인들과 남북한」,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오세종,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조선인의 '가시화/불가시화'를 둘러싼 역사와 담론』, 서울: 소명출판, 2019 등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본고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 진상조사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없다.

17) 일반적으로 총력전 체제 아래 식민지 주민 전체를 '총동원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강제동원'을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인 강제연행 기록운동과 오키나와전투 체험 기록운동이라는 두 마이너리티의 역사기록운동 주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불법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한 '강제연행'을 채택한다.

18) 「27年 만에 벗겨진 日海軍 만행」, 『동아일보』, 1972.8.16.

19)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재외공관 설치-나하(오키나와, 일본) 영사관, 1971~1973』, 관리번호: BA0881171, 1972, 114면.

에 국한된 조사였다.

한편,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은폐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 초기의 집대성이 1965년에 출간된 朴慶植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이다. 당시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의 교원이었던 그는 일본 전역의 공사 현장이나 탄광 등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강제연행된 조선인들의 실태를 조사했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조선인 강제연행’을 역사용어로 학계에 정착시키기도 한<sup>20)</sup> 이 연구서에서 박경식은 식민지 지배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1939년 이후의 조선인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그는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일본 독점자본이 미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한반도를 재침략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 연구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는 전시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조국이 없었던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국주의의 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투쟁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 규명이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진실로 평등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정책을 폭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사상적 토양의 일부라도 되기를 바란다.<sup>21)</sup>

즉,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 규명’은 한반도와 일본 인민들의 진정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개에 맞서는 사상적 토양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박경식은 이 진상규명이 그저 과거에 집착하는 ‘반일’적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식민지기에 일본 본토(‘내지’)로 강제동원된 후에 일본에 정착해 재일조선인사회의 기층을 이루기도 한 조선인들이 해방 후에도 일본 사회에서 식민지기의 조선인 차별정책을 계승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2)</sup> 그는 재일조선인들은 여전히

20) 최영호, 「박경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310면.

21)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東京: 未来社, 1965, 331면.

22) 朴慶植, 앞의 책, 3~4면.



식민주의 아래 놓여 해방되지 못한 조선 민족의 일부이며, 이는 조선과 일본의 진정한 연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박경식에게 진상규명은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일조선인의 권리수호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은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미군 통치하의 오키나와에는 갈 수가 없었으므로, 박경식의 조사 범위도 본토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미국민정부는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에 출입역(出入域)을 관리했기 때문에, 오키나와로 도항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여권)에 미국민정부가 발행하는 입역허가증(비자)을 첨부하여 도항수속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아 실질적인 무국적 상태에서 일본 본토를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오키나와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72년에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조선적' 재일조선인들도 자유롭게 오키나와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항이 가능해지자 이들은 곧바로 오키나와에 건너가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사회국장 河昌玉, 사회국부장 전호언을 포함한 4명<sup>23)</sup>은 일본변호사 연맹 인권옹호위원회 변호사 오자키 스스무(尾崎塾), 평론가 후지시마 우다이(藤島宇内) 등 4명으로 이루어진 일본 측 민간 조사단과 함께 '제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단장은 오자키 스스무. 이하, '조일합동조사단')이라는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1972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일합동조사단은 이후에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홋카이도(北海道, 1973년), 규슈(九州, 1974년), 도호쿠(東北, 1975년),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 1979년)로 현지 조사 활동을 이어가며,<sup>24)</sup> 재일조선인과 일본 시민들의 조직적 조사와 연구라는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의 특징을 확립해 간다.<sup>25)</sup> 반환 직후의 오키나와 현지 조사는 그 시작을 고하는 기념비

23) '보고서'에는 총련 소속 참가자 4명에 대한 정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114면 참조.

24) 김지형, 「일제 강제연행 41만 명부 국내 첫 공개, “자료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민족21』 25, 민족21, 2003, 130면; 山田昭次·柳光守, 「対談 強制連行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朝・日合同の現地調査」, 『月刊イオ』 196, 朝鮮新報社, 2012.

25) 樋口雄一, 「朝鮮人強制動員研究の現況と課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6,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2015, 5면.

적 시도였던 것이다.

이 조사단이 같은 해에 제출한 60쪽 분량의 『제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 보고서(第二次大戦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報告書)』(이하, 보고서)에서는, 조사단 결성의 목적을 “오키나와의 조국 복귀를 계기로, 과거 오키나와 전투에 강제연행되었던 조선인에 대한 학대, 학살의 실태와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또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일본 군국주의 재침략 의도를 꺾고,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한편, 日朝 양국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 제 국민의 우호 관계 증진을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서”<sup>26)</sup>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 규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일본 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베트남 침략에 가담하여 국토나 자재나 역무를 제공하고 혹은 남북한에 대한 침략을 상정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새로운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사상적 기초도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sup>27)</sup> 이는 강제연행 진상규명이 朝日 인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막는 사상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수호 운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박경식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의를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경식의 조사가 주로 탄광, 광산, 토목공사 등에서 강제노동과 학대, 학살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조사는 전쟁터로 강제연행된 조선인들에 가해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잔학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무동원을 둘러싼 피해가 주목되었던 일본 본토의 경우와 달리 ‘군부’나 ‘위안부’처럼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주목되었고 그중에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가 두드러지게 포착되었던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이후의 조사 활동과 비교하여 이 진상조사의 배경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키나와 현지 혁신세력이 조사단의 방문을 성대히 환영하고 지방정부가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조사단은 당시 혁신계 지자체장들이었던 오키나와 현지사 야라 조묘(屋良朝苗)와 나하 시장 다이라

26) 第二次大戦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면.

27) 第二次大戦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57면.

28) 박경식도 “(위안부로 배치된)동포 여성은 중국이나 남방, 오키나와 각 전선에도 다수 연행되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오키나와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朴慶植, 앞의 책, 169면.

료쇼(平良良松)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들은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본토 복귀 운동의 중심단체였던 오키나와현조국복귀협의회를 비롯해 오키나와교직원조합과 오키나와현 노동조합협의회, 오키나와인권협회 같은 각종 인권단체는 도착 직후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했고, 조사 종료 시에도 보고집회가 열렸다. 이 모임들에는 현지 언론매체도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sup>29)</sup> 이 합동조사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었던 한국 정부는 조사단의 활동 목적을 “자위대의 오키나와 진출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혁신계의 움직임과 관련되는 한편, 조총련 오키나와 현본부 결성 및 재일 중앙예술단 ‘나하’ 공연 준비도 목적으로 한 것”<sup>30)</sup>으로 관측하고 있어, 이 조사를 통한 오키나와의 혁신세력과 총련의 협력과 연대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 혁신세력의 환대나 그들과 총련, 나아가 북한과의 연대는 이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실, 북한의 시각에서 오키나와는 ‘미제의 조선 침략기지’인 반면, 극동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존속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만큼, 오키나와와 북한 양자는 서로를 위협하는 적대적 관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미군 점령 하에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미군기지를 반대하고 일본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본토 복귀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일부는 북한이나 북한의 견해를 대변하는 총련과 교류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긴장을 강요하는 원인을 미국에 의한 ‘조국’ 분단으로 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 미군 철수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복귀라는 저항 내셔널리즘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운동에 지속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시했다.<sup>31)</sup>

더욱이 오키나와 반환의 실체가 미군기지의 안정적 운용과 자위대의 오키나와

29)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2면.

30)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115면. 오세중에 따르면, 『류큐신보』 1972년 8월 16일자에도 “이번 조선인 학살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잔인무도한 실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복귀협과 인권협회 등이 이 조사단에 반전평화와 자위대 오키나와 배치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오세중, 앞의 책, 241~242면).

31) 임경화, 「분단과 ‘분단’을 잇다-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 『상허학보』 44, 상허학회, 2015.

배치를 전제로 한 미일군사동맹의 재편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완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망상을 이용해서 아시아 침략의 돌격대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sup>32)</sup> 한편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일본 정부의 자위대 배치 강행에 따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금 오키나와전투에서의 일본군의 잔혹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었다.<sup>33)</sup>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전투에서 ‘철의 폭풍’이라 불릴 만큼 미군의 맹렬한 공격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대로부터도 집단자결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스파이 혐의로 학살당하거나 식량을 빼앗기고 방공호로부터 쫓겨나기도 하며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따라서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진상조사는 일본군에 의한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의 재무장에 위기의식을 갖는 집단 모두에게 긴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 ‘조일합동조사단’은 조선인 ‘군부’들이 물자수송, 진지 구축, 참호 파기 등에 동원되어 혹사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인 여성들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조사는 우선 오키나와 현사(沖縄県史), 나하시사(那覇市史) 편찬 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sup>34)</sup> 사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류큐열도의 섬들을 찾아다니며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본토 복귀 운동의 전개를 배경으로 1965년부터 류큐정부의 주도로 편찬되기 시작한 『오키나와현사』(전24권)에 오키나와전투 기록 간행 계획이 3권 편성으로 수립되면서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오키나와전투 연구가 개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 중 2권은 특히 주민들의 증언에 의한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에 할애되어 1969년부터 집필진들에 의해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던 것이다. ‘조일 합동 진상조사’가 개시되었을 때는 이미 그 첫 권인 『오키나와현사』 제9권(沖縄戦記録 1, 1971)<sup>35)</sup>이 간행된 후였고, 두 번째 권인 『오키나와현사』 제10

32) 김일성,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캄보자 국가 원수이며 캄보자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6일」, 『김일성 저작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3) 新崎盛暉, 『沖縄現代史』(新版), 東京: 岩波書店, 2005, 30면.

34)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2면.

35) 琉球政府 編, 『沖縄県史』 9(沖縄戦記録 1), 琉球政府, 1971.

권(沖繩戦記録 2, 1974)<sup>36)</sup>이 준비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나하시시 편찬실도 1971년에 시민의 전시 체험기를 공모하여 『시민의 전시 체험기(市民の戦時体験記)』 제1권<sup>37)</sup>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의 주민 학살 등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1970년에 오키나와현교직원조합에서 전쟁범죄 추궁위원회가 조직되어 『이것이 일본군이다-오키나와전투의 잔학행위(これが日本軍だ-沖縄戦に置ける残虐行爲)』(1972)<sup>38)</sup>가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일본군이 주민들을 스파이로 간주하여 학살한 사건이나 집단자결 강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39)</sup>

‘조일합동조사단’은 이들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여기에는 “대체로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여 다른 사실에 관련해서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언급”<sup>40)</sup>되는 것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키나와전투의 또 하나의 주체인 조선인의 시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이 거의 돌아보지 않았던 강제연행에 희생된 조선인 ‘위안부’라는 오키나와전투의 새로운 주체를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켰던 것이다.

우선, 이 조사단이 자료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낸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도가 공간적으로 오키나와 본도뿐만 아니라 류큐열도 여러 섬의 사례를 망라한 최초의 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단은 이시가키섬(石垣島), 이리오모테섬(西表島), 미야코섬(宮古島), 도카시키섬(渡嘉敷島), 자마미섬(座間味島), 아가섬(阿嘉島), 구메섬(久米島)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20년 후인 1992년에 복귀 20년을 회고하기 위해 나하에서 개최된 제5회 전국 여성사연구 교류 모임(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에서 ‘오키나와의 여성사를 생각하는 모임(沖縄の女性史を考える会)’은 최초로 121개소의 위안소를 특정해 지도에 표시하고 조선인 위안부의 인원수를 554명 이상으로 추정한 획기적인 발표(모임 당시 추정치)를 해서 주목을 받았다.<sup>41)</sup> ‘조일합동조사단’

36) 沖縄県教育委員会 編, 『沖縄県史』 10(沖縄戦記録 2), 沖縄県教育委員会, 1974.

37) 『市民の戦時体験記』 1, 那覇市市役所市史編集室, 1971.

38) 沖縄県教職員組合・戦争犯罪追求委員会, 『これが日本軍だ-沖縄戦に置ける残虐行爲』, 沖縄県教職員組合, 1972.

39) 石原昌家, 「沖縄戦体験記録運動の展開と継承」, 『沖縄文化研究』 12,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 1986, 243~245면.

40)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4면.

의 ‘보고서’는 ‘오키나와의 여성사를 생각하는 모임’의 발표가 있기 전의 유일한 종합적 보고였던 것이다.<sup>42)</sup>

〈표 1〉 오키나와 본도의 사례

| 미군 상륙 이전                              |                                                | 미군 상륙 후                               |                |
|---------------------------------------|------------------------------------------------|---------------------------------------|----------------|
| 사항                                    | 출전                                             | 사항                                    | 출전             |
| 사령부 호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천여 명의 군인과 함께 기거      | 沖繩戦史                                           | 주민들과 분리되어 미군 감시하의 2세 경영 바에서 미군 위안부가 됨 | 大城将保           |
| 조선에서 특별간호부로 연행된 17, 8세 여성 50명이 위안부로 됨 | 日本軍を告発する                                       | 미군의 수용소에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 仲宗根政善<br>千原繁子  |
| 양재학교 모집으로 알고 끌려와 위안부가 됨. 양가의 자녀로 보임   | 大城将保                                           | 미군의 병원에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 天願恭子<br>大城博    |
|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 山田義時<br>仲宗根政善<br>座喜味和則<br>上里金助<br>大城将保<br>大城政仁 | 미군의 북부지구 사령부 내에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                |
|                                       |                                                |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 伊良波ツル子<br>平良哲夫 |

41) 『報告集』編集委員会, 『沖繩から未来を拓く女性史を-第五回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報告集』, 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実行委員会, 1994, 25~31면.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전 지역으로 확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wam)’의 ‘위안소 지도’(<https://wam-peace.org/ianjo/map/>)는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시작되었다.

42) 九州弁護士会連合会, 『日本の戦後処理を問う-復帰二十年の沖繩から』(第45回九弁連大会シンポジウム報告集), 1992.

〈표 2〉 본도 이외 섬의 사례

| 도서명             | 사항                                                                                                                                                                                                | 출전                     |
|-----------------|---------------------------------------------------------------------------------------------------------------------------------------------------------------------------------------------------|------------------------|
| 자마미섬<br>(座間味島)  | 에이코, 고나미, 미에코, 이케가미 도요코(池上トヨコ) 등 조선 여성 7명이 1945년 1월에 끌려와 에이코는 총탄을 맞고 사망.                                                                                                                          | 宮城初枝                   |
| 아카섬<br>(阿嘉島)    | 조선 여성 7명이 1944년 9월경 끌려옴. 1명은 19세, 나머지는 20대. ‘南風莊’이라는 클럽 설치. 오전에 병사들과 함께 일하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전 부대(일본 장병 300명)를 상대하게 함. “빨리 돌아가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거나 조선의 노래를 쓸쓸히 불렀다. 3명이 죽었는데 그중 1명은 총탄에 맞았다. | 兼島キク<br>(위안소<br>취사 담당) |
| 도카시킴섬<br>(渡嘉敷島) | 처음에 24~30세 조선 여성이 20명 있었다. 미군 상륙 당시 4~5명 피난, 2명이 폭탄으로 사망. 7명이 남겨짐.                                                                                                                                | 米田惟好                   |
|                 | 조선 여성은 7~8명, 간호부라고 했다.                                                                                                                                                                            | 小峰栄次郎                  |
|                 | 날짜를 정해 섬의 몇 군데를 이동, 7~8명 있었는데 4~5명은 전사. 4명은 탈영하여 미군에 투항한 소네(曾根)와 함께 있었다.                                                                                                                          | 大城良平                   |
|                 | 도카시킴에 3~4명 있다가 도카시쿠(渡嘉志久)로 옮겼다. 병사했다고 들음.                                                                                                                                                         | 新城信平                   |
| 미야코섬<br>(宮古島)   | 아하렌(阿波連)에 3~4명 있었는데 사라졌다.                                                                                                                                                                         | 玉城重保                   |
|                 | 젊은 여성들을 50명 정도 데려왔다. 군의 행태는 너무 심했다.                                                                                                                                                               | 與名覇正吉                  |
| 이리모테섬<br>(西表島)  | 일본 여성 약 20명을 데려와서 만든 위안소와 타이완에서 데려온 조선 여성으로 구성된 위안소가 있었는데, 전자는 장교와 하사관용, 후자는 병대용. 전쟁 격화 후 이들의 행방은 불명. 요나구니섬(與那国島)에서 데려온 위안부 중에도 조선 여성이 1명 있었다.                                                    |                        |

조사단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봉기가 끌려갔던 도카시킴섬에 관한 증언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3년 후의 그녀의 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증언자 중 신조 신페이(新城信平)는 현지에서 소집된 방위대원으로 야마타니 데쓰오(山谷哲夫) 감독의 다큐멘터리 『오키나와의 할머니』(1979)에서도 증언을 남기고 있다.<sup>43)</sup>

43) 山谷哲夫, 『沖縄のハルモニ-大日本売春史』, 晩聲社, 1979, 145~146면.

또 한 가지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적으로도 오키나와 전투 당시뿐만 아니라 미군 점령 후 조선인 ‘위안부’에 가해진 미군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배봉기의 사례를 참조하면, 미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거나 즉각적인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미군은 애초에 조선 여성을 그 조국으로 돌려보낼 의지가 없었다. 미군은 조선 여성을 송환을 위해 한곳에 모으지 않고 본섬 각지에 설치된 미군기지에 수명에서 20명 정도의 단위로 분산배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4)</sup> 또한 양재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온 조선 여성들을 미군 전용 바에서 일하게 했다는 지, 간호사로 고용한다면서 실제로는 미군 장병의 노리개로 삼은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에서도 나하의 택시운전사 도마(当間) 씨는, 일본군을 상대할 때 ‘조선빠’라고 불렸던 조선 여성들이 미군 포로가 된 후로는 미군을 상대하는 ‘팡팡’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미군 점령 후 첫 번째 ‘팡팡’은 조선 여성들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up>45)</sup> 초기의 증언에 따르면 배봉기도 미군 장병들을 상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일본군에 의해 군사기지화되고 전쟁터가 되었던 오키나와는 미군의 점령 이후에도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기지로 더욱더 무장하게 되었던 만큼, 이 보고서는 조선인 피해 생존자들에게 일본군에 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구조와 역할이 변형되어 이어졌던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미 제국주의가 점령 지배한 오키나와에서는 조선인은 해방되지 못하고 오키나와 현민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민족적인 멸시와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sup>47)</sup>

한편, 조사단은 현지 교포들로부터는 그다지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 외무부 문서철에는 이들이 대부분 미군 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현지 마찰에 개입되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sup>48)</sup> 그렇다고 조사단이 증언이나 자료 수집에 있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단 한

44)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3면.

45) 山谷哲夫 제작·감독, 앞의 작품.

46) 「일제시기 오키나와에 끌려온 한 할머니의 피의 고발-원수들의 발굽에 청춘과 삶을 짓밟혀」, 『朝鮮新報』, 1977년 4월 23일.

47)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0~11면.

48)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117면.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직접 만나 그녀의 증언을 듣는 데에 성공했다.

‘위안부’로 강제연행된 어떤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만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 공포와 경계, 의심에 찬 매서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조선이 해방되어 독립한 것조차 몰랐다. 더욱이 조국이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현실을 알 리도 없었다. 철 들기 전부터 남양의 사이판, 라바울 등으로 끌려간 그녀는 자신의 고향 이름은커녕 자신의 본명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울면서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말한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속여 또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온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모든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한 그녀들의 마음의 아픔은 조국이 해방된 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키나와가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했던 것이다.<sup>49)</sup>

조사단은 배봉기의 증언이 있기 3년 전에 이미 어떤 피해 생존자를 만나 또 다른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치적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감안하여 참조하면, 어린 나이에 남양군도의 전장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후 오키나와에 방치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성의 삶의 궤적이 그려진다. 하지만 “조선이 해방되어 독립한 것조차” 모른 채 이국땅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 생존자는, 배봉기와는 달리, 이 시점에는 공개 증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 Ⅲ. 상호 참조의 마이너리티 역사기록운동

이 조사단의 활동은 『류큐 신보』, 『오키나와 타임즈』 외에 본토의 신문 각지에도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9월 4일에는 NHK TV로도 방영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sup>50)</sup> 9월 6일에 열린 중앙예술단의 공연도 류큐방송(琉球放送)에서 촬

49)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4면.

영되어, 한국 외무부는 이를 “조총련의 파상적 진출”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할 태세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고했다.<sup>51)</sup>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 진상조사가 역으로 기록운동의 당사자인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진상조사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오키나와전투 당시 주민들의 눈앞에 있었던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의 존재를 망각한 것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당시 오키나와현 사료편찬소 소장이었던 작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는 『오키나와 타임즈』의 특집 「『또 하나의 오키나와전투』의 실체」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오키나와인 전체가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특히 조선인에 대한 ‘의식의 결락’이 있는 것이야말로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sup>52)</sup>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단의 조사 활동 종료 시에 열린 보고집회에 참가한 오키나와 활동가들은 “앞으로 오키나와 현민의 손으로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없지만)현지 조사단 결성을 위한 연락 책임자들이 정해지기도 했다.<sup>53)</sup> 오키나와문학 연구자인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는 ‘오키나와인’ 스스로를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라는 “역사인식 속에서 공백 상태에 있던 ‘타자’의 존재와 직면하도록 촉구하여 역사인식의 폐색을 부수는 계기가 되어 강제연행 조선인, 위안부의 기록이 소생되었다”고 하며, 그 결과의 하나로 『오키나와현사』 제9권 출간 3년 후인 1974년에 나온 제10권에는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조선인’에 관한 기술이 많이 담기게 되었다고 했다.<sup>54)</sup>

오키나와 현사와 시정촌사에 수록된 조선인 ‘위안부’, ‘군부’, ‘위안소’에 대한 증언과 수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데루야 다이테쓰(照屋大哲)의 조사를 참조하여 작성된 <표 3>에 따르면, 1971년에 간행된 『오키나와 현사』 제9권에는 위안소에 관한 증언이 2건, 『시민의 전시 체험기』 제1집에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4

50) 第二次大戦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3면.

51)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115면.

52) 大城立裕, 「『もう一つの沖縄戦』の実体」, 『沖縄タイムス』 1972년 8월 22일.

53) 第二次大戦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3면.

54) 新城郁夫, 『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 東京: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135~137면.

년에 편찬된 『오키나와현사』 제10권에는 8건에 이르고, 『나하시사 자료편』 제2권의 증언을 더하면 총 12건의 '위안부' 관련 증언이 수집된 것이다. 위의 <표 1>에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을 남겼던 오시로 마사야스(大城將保)와 아마다 요시토키(山田義時)는 『오키나와현사』 제10권의 집필을 담당하기도 했다.

〈표 3〉 오키나와 현사·시정촌사의 조선인 '위안부' 관련 기사

| 출판연도 | 서명             | 증언자   | 내용                      |
|------|----------------|-------|-------------------------|
| 1971 | 오키나와 현사 9      | 安里要江  | 마카베(真壁)의 위안소            |
|      |                | 新垣カメ  | 위안소                     |
|      | 시민의 전시 체험 기록 1 | 平田波津美 | 칸(喜屋武)의 위안소             |
| 1974 | 오키나와 현사 10     | 揚添福   | 이리오모테섬(西表島)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池村恒正  | 미야코섬(宮古島)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砂川昌良  | 미야코섬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照屋忠次郎 | 모토부초(本部町)의 위안소          |
|      |                | 知念朝睦  | 도카시키섬(渡嘉敷島)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金東善   | 나하시(那覇市)의 위안부           |
|      |                | 좌담회   | 미나미다이토섬(南大東島)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粟国コシ  | 슈리(首里)의 위안부             |
|      | 나하시사 자료편 2중6   | 字九田秀格 | 칸의 위안소와 위안부             |
|      |                | 宮里親輝  | 이토만(糸満)의 위안부            |
|      |                | 玉井亀吉  | 나하의 위안소                 |
|      |                | 池宮城秀意 | 위안부                     |

그런데, 배봉기의 증언과 관련하여 이 진상조사의 가장 주목되는 의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오키나와전투 연구와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을 이끌며 『오키나와 현사』 집필에 관여했던 오시로 마사야스나 이시하라 마사이에(石原昌家), 아니야 마사아키(安仁屋政昭) 등이 정리하고 있듯이, 이 운동은, 그때까지 구일본군 출신이나 관청에 의해 편찬된 오키나와전투 기록이 군대의 논리에 입각하여 주민들을 전투 협력이나 애국심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진상에 다가가려는, 이른

바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 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sup>55)</sup> 더욱이 반전평화의 희구이기도 했던 본토복귀운동이 복귀 이후에도 미군기지의 존속과 자위대 배치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전쟁체험의 발굴과 기록 작업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체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요청<sup>56)</sup>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인식을 군대의 논리에 입각한 것에서 주민의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sup>57)</sup>

조사단은 이러한 방법론을 참조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오키나와전투에서 본토 방위의 이름 아래 전쟁의 희생이 된 오키나와 현민에 대한 구일본군의 잔학행위는 오키나와 현민 스스로의 손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오키나와전투에서 구일본군에 강제연행된 다수의 조선인의 실태에 대해서는 주목되는 일이 적었다”<sup>58)</sup>고 비판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체 확립 기획 속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배제된 조선인의 시점에서 조선인을 주체로 하여 오키나와전투의 진상을 파헤치고자 했다.<sup>59)</sup> 일본제국주의의 장기에 걸친 식민지 지배와 탄압 속에서 침략전쟁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본사회의 차별과 배제라는 식민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마이너리티의 논리는 주민의 논리 속으로 회수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이 입각했던 주민의 논리는 조사단에게 마이너리티의 논리를 촉발시키는 사상적 계기가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선인 및 오키나와 현민에 대한 구일본군의 만행이 밝혀진 반면, 구일본군에 박해받은 조선인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이 보여준 깊은 동정의 사실도 다수 존재했던 것이 명확해졌다. 나아가 조사에서는 현민 각위의 열의 넘치는 협력을 얻었다. 이 인민연대의 씨앗은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sup>60)</sup>고 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의 움직임이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쓰기 운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오키나와 주민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55) 嶋津與志, 『沖繩戦を考える』, 那覇: ひるぎ社, 1983; 石原昌家, 앞의 글; 安仁屋政昭, 앞의 글.

56) 安仁屋政昭, 「庶民の戦争体験記録について」, 沖縄県教育委員会 編, 『沖縄県史』 10(沖縄戦記録 2), 沖縄県教育委員会, 1974, 1114면.

57) 嶋津與志, 앞의 책, 127면.

58)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면.

59) 임경화, 앞의 글, 566면.

60)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59면.

가로놓인 차별의 중층적 구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것은 일본인과 오키나와 주민 사이에 가로놓였던 차별의 구조가 오키나와와 조선인 사이에서도 존재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오키나와전투의 최대의 피해자로만 표상되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조선인에 대한 가해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오키나와에 강제연행된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오키나와에서는 전후에 오키나와 여성이 무사했던 것은 조선의 여성 덕분이라는 말이 나돌았다.”<sup>61)</sup>는 등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에 '소모품'으로 취급당했고 오키나와인에 의한 차별에도 노출되어 희생을 강요당했던 조선인을 주체로 한 오키나와전투의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단의 활동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키나와현사』 제10권의 총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필자인 아니야 마사아키는 군대의 논리에 입각한 기록물들은 오키나와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선인 군부의 생활도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며, “그것은 조선인의 생명을 별레처럼 여겼던 ‘황군(=구일본군)’의 생각의 반영이겠지만, 그러한 조선인의 운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이 그대로 현재 방위청이 공간한 戰史에 계승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sup>62)</sup> 동시에 그는 일본 국민이었으면서도 차별에 직면해야 했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실상을 파헤치며, 일본군으로부터 “오키나와 여성은 비누 하나로 정조를 판다. 장교의 위안부가 되었으니 감사히 여기라”는 말을 들었던 오키나와 여성의 증언도 소개한다.<sup>63)</sup>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오키나와 주민이라는 논리가 갖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오키나와 현민이 전쟁체험을 기록하는 관점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조선에서 강제연행된 군부나 위안부, 야에야마(八重山)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동원된 타이완인 노동자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오키나와 현민은 그들에 대해 말 그대로 가해자의 입장에 세워져 왔지만, 현민의 증언으로서는 불확실한 단편적 보고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sup>64)</sup>

61)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편, 앞의 책, 13면.

62) 安仁屋政昭, 앞의 글, 1096면.

63) 安仁屋政昭, 앞의 글, 1101면.

64) 安仁屋政昭, 앞의 글, 1108면.

나아가 아니야는 스스로의 피해에 항거하지 못하고 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지배계급에 가담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가해성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 인민과 아시아 인민의 피해를 통해 그 원흉인 지배계급의 범죄를 고발하고, 스스로도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지배계급에 가담한 죄를 명백히 하는 것이 전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sup>65)</sup>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해서 부언하면,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억압받는 지역으로서의 오키나와의 해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아시아 민중에 대해서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66)</sup> 전쟁과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와 역사로부터 망각당한 배봉기와 같은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때, 마이너리티의 시점을 공유한 이 ‘주민의 논리’는 피해자의 존재를 품고 역사 속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논리가 될 수 있었다.

#### IV. 한국의 ‘진상조사’

한편, 이 진상조사 활동은 실은 한국의 언론매체에도 소개된다. 『경향신문』은 조사단을 일본변호사연맹 인권옹호위원회 변호사들로 구성된 일본인 단체로 소개하여 총련의 존재가 소거된 기사를 두 차례 실었다. 특히 “軍 위안부도 1천 명 이상이 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중에는 14~15세의 어린 소녀도 끼어 있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여, ‘보고서’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sup>67)</sup> 반환 이후 오키나와에 대한 한국에서의 고조된 관심을 배경으로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총련이나 북한의 존재를 은폐하면서까지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조사단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미육군전략정보국(OSS) 대원으로 참전했던 장기영(張基永)도 1973년에 『경

65) 安仁屋政昭, 앞의 글, 1111면.

66) 石原昌家, 앞의 글, 250면.

67) 「日 辯護士調査團이 밝혀낸 眞相 2次 大戦 末 殘酷의 犠牲 오키나와 韓國人들」, 『경향신문』 1972년 10월 27일.

향신문』에 관련 증언을 한다. 그는 미군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선발대로 오키나와로 파견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조우하게 된다.

‘오키나와’ 시내 어느 찻집에 들어가니 스무 살 미만의 여자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당신네들 어디에서 왔소?” 日語로 묻자 “半島에서 왔다”고 日語로 대답했다. “半島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요?”라고 묻자 “우리는 韓國人입니다”라고 여자들은 대답했다. “나도 韓國人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자 여자들은 엉엉 울었다. 그들은 日軍 위안부로 韓國에서 강제로 끌려왔던 것이다.<sup>68)</sup>

이 진상조사 이후로 배봉기의 발견까지 한국에서도 오키나와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가 주목되어 그것이 '강제연행'이라는 인식(강조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싸고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촉발했던 일본의 재무장 문제보다는 대북 방위에 필수적인 미군기지의 축소에 더 큰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나하 한국영사관의 설치를 요청했다.<sup>69)</sup> 이듬해 3월에 개설된 나하 영사관은 교민 보호나 영사업무 같은 일반 업무와 함께 “안보문제와 관련한 현지 상황의 신속한 보고”나 “민단조직 활동 강화와 조총련계 침투 공작 저지”라는 특수한 역할을 맡게 된다.<sup>70)</sup> 특히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오키나와의 혁신세력들과 총련의 우호관계는 한국 정부와 민단을 긴장시켰다. 예컨대 1973년 2월에 총련 오키나와현본부 주최로 나하에서 열린 북한 영화 《꽃 파는 처녀》(1972)의 상영회에 약 1천 명의 관객이 모여 성황을 이루자, 외무부는 “조총련의 허위 선전에 대처하고” 교민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국의 발전상 소개 홍보 영화 상연 실현”과 “장기 홍보 계획 수립”을 주후쿠오카(福岡) 총영사관에 지시하기도 했다.<sup>71)</sup>

68) 「내가 겪은 二十世紀 55-石正 張基永 씨」, 『경향신문』, 1973.8.11.

69) 「日紙 注目할 報道-韓國의 오키나와領事館 計劃 美軍基地 縮小 牽制할 可能性」, 『東亞日報』, 1972.2.3.

70) 외무부, 「오키나와에서의 조총련 동향」, 118면.

71) 외무부, 『조총련 동향, 1973』, 관리번호: BA0881372, 1973, 111~114면.

그런데 1974년 3월에 갑자기 한국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징용 또는 징병당한 한국인이 오키나와에서 몰살되었거나 대량 학살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참사관 1명을 오키나와에 파견한다.<sup>72)</sup> 하지만 외무부 문서철에 따르면 이 ‘조사’의 실질적인 목적 또한 “이러한 사실을 탐지하고 위령탑 건립을 기도하고 있”는 북괴에 맞서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 참사관의 조사는, 1971년에 건립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인 청구의 탑(靑丘之塔)과 조선인 일가족 학살사건이 있었던 구메섬을 답사한 것 외에는 오키나와현사 편찬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2차 대전 당시 징용, 징병당하여 또는 위안부로 강제로 오키나와에 파견된 한국인의 총수는 1만 명 내지 2만 명으로 추산하며 일본 전투병력 10만 명 중 생존자가 1만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투원보다 희생물이 많았던 한국인 노무자들의 희생수를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2차 대전시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한국인에 관한 종합된 조사 자료로서는 별첨 제2차 대전시 오키나와 조선인 강제연행 학살 진상조사단 보고서(이는 동 문제에 관한 유일한 종합된 조사서임), 또한 오키나와 현사 편찬실 실무자들은 **동 보고서는 다소 과장된 점과 정치 선전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신빙도가 높은 것**이라고 말하였음.<sup>73)</sup>

즉,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비판하고 미군기지의 즉각적인 전면반환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혁신세력과 연대하면서 반환 후의 오키나와에 착근하고자 하는 총련 측의 정치적 의도나 과장된 수사를 제외하면 이 ‘조일 합동 진상조사’의 보고서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등의 현사 편찬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한 것이 한국정부의 ‘조사’의 대부분이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조사’는 오로지 위령탑 건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립 목적은 “망령을 위로하고 북괴에 기선을 제하여 아국이 동 지역에 위령탑을 건립함으로써 북괴의 오키나와 침투 여지와 구실을 없애고자 하는 데 있”<sup>74)</sup>었으

72) 외무부,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1974~1975』 1, 관리번호: DA0093946, 1974, 4면. 아울러 본 자료에 대해서 언지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73) 외무부,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1974~1975』 1, 11면.

74) 외무부,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1974~1975』 1, 15면.



며, 이 사실들은 거의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표면적으로는 민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주도 아래 위령탑 건설이 추진되었고, 1975년 8월에 이토만시(糸満市)의 평화기념공원 입구에 한국인위령탑이 건립되었다. 9월 3일에는 한국의 보건사회부 장관, 주일대사, 거류민단장 등 한일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되었다.<sup>75)</sup>

일반적으로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해결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때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은 무시하고 위령탑 건립에만 집착했던 것은 피해자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반환된 오키나와에서의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남한의 정통성을 알리고 그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위령탑의 비문에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강제 징모로 대륙과 남양 여러 전선에 배치될 적에 이곳에 징병 징용된 사람 1만여 명이 무수한 고초를 겪었던 것만이 아니라 혹은 전사도 하고 혹은 학살도 당하여 아깝게도 희생의 재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어, ‘조일 합동 진상조사단’이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는 삭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봉기가 공개 증언을 하기 1개월여 전에 완공되어 화제를 뿌린 이 위령탑이 현지에서 오키나와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또한 배봉기의 등장 of 사회적 배경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1972년에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의 진보적 활동가들과 함께 오키나와전투 당시 조선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하여 반환 직후의 오키나와에서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6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오키나와 주민들에 의한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과 연계하여 그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

---

75) 「沖繩 韓國人 위령탑 제막 高保社・金駐日 大使 등 참석」, 『경향신문』, 1975.9.4.

이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 운동을 전개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와 군대에 의해 독점된 전쟁 기록에 대항하여 주민들의 전쟁 체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역사화해 간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주민들의 전쟁 체험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조선인 군부는 물론 ‘위안부’를 둘러싼 체험과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한편,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통해 오키나와전투 체험기록운동과 만나게 되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조선인 ‘군부’나 ‘위안부’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되살리고 기록해내는 데 성공한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었던 조선인 강제연행 기록운동과 오키나와 전투 체험 기록운동이라는 이들 두 마이너리티의 역사기록운동은 서로를 의식하고 참조하며 역사적 사실의 발굴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혀 갔던 것이다.

아울러, 이 성과는 한국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사수정주의적 주장의 허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영훈은 2019년에 간행한 『반일 종족주의』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 노무자들이 “노예로 강제연행되었다거나 혹사되었다는 오늘날의 통념은 1965년 이후 일본의 조총련계 학자들이 만들어 낸 엉터리 학설이 널리 퍼진 결과일 뿐”<sup>76)</sup>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65년,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의 교원 박경식(朴慶植)이 강제연행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일제가 잔혹하게 조선인을 착취했다”고 선동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포위되기 때문입니다.<sup>77)</sup>

1965년에 간행된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형성과정에서의 일본 재무장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도록 실천을 촉구하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은 오키나와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영훈의 위와 같은 인식에는 이 진상조사가 한반도와 일본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일조선인의 권리수호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

76)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9~20면.

77) 이영훈 외, 앞의 책, 67~68면.

이 간과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룬 재일조선인들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진상조사는,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식민주의 속에서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면서 구제국 일본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일본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선과 그 교차가 이루어낸 성과이지 북한의 고립을 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친북 활동의 일환이 아니었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키나와의 주민들이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해 본토와 다른 층위의 관계 맺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국가가 수행한 침략전쟁의 참상을 아래로부터의 시선으로 상대화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축적한 결과였으며, 아래로부터의 시점은 오키나와전투의 또 하나의 피해 주체인 조선인을 발견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오키나와 전투 체험을 기록하는 운동의 질적 변화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배봉기의 등장을 준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소현숙, 「기림의 날에 기억하는 김학순과 그녀의 증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http://www.kyeol.kr/node/180>, 게시일: 2019.08.16
- 외무부, 『재외공관 설치-나하(오끼나와, 일본) 영사관, 1971~1973』, 관리번호: BA0881171,  
1973
- \_\_\_\_\_, 『조충련 동향, 1973』, 관리번호: BA0881372, 1973
- \_\_\_\_\_,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1974~1975』 1, 관리번호: DA0093946, 1975
- 김미혜, 「오키나와의 조선인-배봉기 씨의 ‘자기증명’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나를 증명  
하기-아시아에서의 국적·여권·등록』, 한울, 2017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 한국정신대연구소,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여성가족부, 2006
- 김지형, 「일제 강제연행 41만 명부 국내 첫 공개, “자료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민족21』  
25, 민족21, 2003
- 오세중,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조선인의 ‘가시화/불가시화’를 둘러싼 역사와 담론』, 소  
명출판, 2019
- 임경화, 「‘분단’과 ‘분단’을 잇다-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 『상허학보』  
44, 상허학회, 2015
- \_\_\_\_\_, 「오키나와의 아리랑-미군정기 오키나와의 잔류 조선인들과 남북한」,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최영호, 「박경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 九州弁護士会連合会, 『日本の戦後処理を問う-復帰二十年の沖縄から』(第45回九弁連大会シン  
ポジウム報告集), 1992
- 金美恵, 「沖縄のなかの朝鮮人(下)」, 『月刊イオ』 209, 朝鮮新報社, 2013
- 那覇市市役所市史編集室, 『市民の戦時体験記』 1, 那覇市市役所市史編集室, 1971
- 嶋津與志, 『沖縄戦を考える』, 那覇: ひるぎ社, 1983
- 琉球政府 編, 『沖縄県史』 9(沖縄戦記録 1), 琉球政府, 1971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東京: 未来社, 1965
- 山谷哲夫 제작·감독, 『沖縄のハルモニ-証言·従軍慰安婦』, 無明舎, 1979
- 山谷哲夫, 『沖縄のハルモニ-大日本売春史』, 晩聲社, 1979

- 山田昭次・柳光守, 「対談 強制連行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朝・日合同の現地調査」, 『月刊イオ』 196, 朝鮮新報社, 2012
- 石原昌家, 「沖縄戦体験記録運動の展開と継承」, 『沖縄文化研究』 12,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 1986
- 新崎盛暉, 『沖縄現代史』(新版), 東京: 岩波書店, 2005
- 新城郁夫, 『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 東京: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 安仁屋政昭, 「庶民の戦争体験記録について」, 沖縄県教育委員会 編, 『沖縄県史』 10(沖縄戦記録 2), 沖縄県教育委員会, 1974
-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報告書』, 東京: 第二次大戦時沖縄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1972
- 照屋大哲, 「沖縄県史・市町村史に収録された朝鮮人「慰安婦」「軍夫」「慰安所」についての証言・手記に関するデータベース」, 『琉球アジア社会文化研究』 19, 琉球アジア社会文化研究会, 2016
- 川田文子,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東京: 筑摩書房, 1987
- \_\_\_\_\_, 『イアンフとよばれた戦場の少女』, 東京: 高文研, 2005
- 沖縄県教育委員会 編, 『沖縄県史』 10(沖縄戦記録 2), 沖縄県教育委員会, 1974
- 沖縄県教職員組合・戦争犯罪追求委員会, 『これが日本軍だ-沖縄戦に置ける残虐行爲』, 沖縄県教職員組合, 1972
- 樋口雄一, 「朝鮮人強制動員研究の現況と課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6,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2015

## Minorities' History Recording Movement and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Army on Okinawa

Lim, Kyoung-hw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cial background which enabled Grandma Pae Ponggi, a surviving victim of Japanese Army-operated 'comfort women' recruitment, to come up with her pioneering public testimony in 1975. Two crucial elements of this background are the fact-finding activities on the forcible mobilization of Koreans which took place in 1972, right after Okinawa's reversion to Japan, and the related movement for recording the first-hand experiences of the Battle of Okinawa. The residents of Okinawa had been engaged in the testimony collection on the Battle of Okinawa since the late 1960s. Resisting the tone of the official war histories mostly based on military and bureaucratic logic, they recorded their experiences. The Joint Korean-Japanese Investigative Commission for fact-finding on the forcible recruitment of Koreans in the time of the Battle of Okinawa, which was formed in 1972, followed on the earlier achievements of this testimony-collecting movement. At the same time, it managed to revive the memories and experiences about the Korean 'military labourers' and 'comfort women', at that time already forgotten among Okinawa's residents. Okinawa residents' attempt to engage in a criticism of aggressive war's horrors 'from below' resulted in their sympathy towards the fact-find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forcible recruitment of Koreans.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the experiences of Koreans, yet another group of Battle of Okinawa's victims, helped Okinawans to relativize their own victimhood and start also recording the history of their own war responsibility. This qualitative shift of Battle of Okinawa testimony-collection movement prepared the scene for emergence of Pae Ponggi.

**Key Words :** Pae Ponggi, Okinawa,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army, fact-finding investigations on wartime forcible mobilization of Koreans, movement for recording the first-hand experiences of the Battle of Okinawa, mutual reference